



보행자 안전 제고를 위한 일시정지 표지판 관련 제도개선방안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 2013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8.9%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횡단보도·교차로 일시정지 표지판의 설치와 이에 대한 관리 미흡을 꼽을 수 있음. 미국·영국 등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큰 액수의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많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교통·경찰 당국은 보행자 보호 제고를 위해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 확대, 과태료·범칙금·벌점 강화 및 단속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국가 중 높은 편이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8.9%로 OECD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국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과거에 비해 증가폭이 줄어들었으나 여타 OECD국가에 비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아직도 높은 편임.¹⁾
 - OECD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높은 순서): 미국(503.3건), 일본(494.4건), 오스트리아(455.5건), 한국(428.8건), 벨기에(369.8건), 영국(225.3건)
-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1명으로 OECD국가 중 3위로 매우 높음.
 - OECD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높은 순서): 칠레(12명), 미국(10.3명), 한국(10.1명), 폴란드(8.7명), 룩셈부르크(8.4명), 그리스(7.9명), 일본(4명), 영국(2.8명)
- 교통사고 사망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봤을 때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8.9%로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음.²⁾

1) 한국도로교통공단(2015), 『2014년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 p. 34.

2) 한국도로교통공단(2015), 『2015년판(2013년 통계)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p. 20, p. 43.

- OECD국가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높은 순서): 한국(38.9%), 칠레(38.9%), 일본(36.2), 폴란드(34%), 미국(14.2%)
-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2014년 기준으로 약 24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내 GDP의 1.8%, 국가예산의 9.7%에 맞먹는 규모임.³⁾

■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이처럼 높게 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일시정지 관련 현행 제도를 꼽을 수 있음.

- 운전자 의식수준, 국가 경제수준, 도로시설, 제도 등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높은 교통사고율이 초래됨.
 - 예산 및 관리인력 부족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다수 존재하는데, 예컨대 2014년 현재 서울시 3만 2천 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없는 곳이 72%를 차지함.
- 현행 법규상 일시정지 표지판 앞 차량의 일시정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많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2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벌점 없이 3~7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됨.⁴⁾
- 더불어 현재 교통표지판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또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2008년 기준으로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된 1,400만여 건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3.09%), 무면허운전(1.37%), 신호위반(12.18%), 중앙선침범(0.54%), 과속(62.99%), 안전운전 의무위반(0.61%), 기타(0.02%) 등으로 나타나, 교통표지판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⁵⁾
- 현재 운전자들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함.⁶⁾
 - 현행법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일시정지 등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⁷⁾되어 있기 때문임.
 - 특히, 신체 능력 또는 분별력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한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호등이 없

3) 한국도로교통공단(2015), 『2014년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 p. 83.

4)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 범칙금: 경찰관에 의한 단속

5) 도로교통공단(2013), 『교통법규위반 유형별 단속현황』.

6) TBS교통방송(2016. 1. 27),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아슬아슬’”.

7)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시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해야 함.

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⁸⁾

■ 이에 반해 미국과 영국은 한국보다 강한 수준의 보행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 뉴욕 주 『차량·교통법』 제26장 1142절(Vehicle and Traffic Law, Article 26, Section 1142)⁹⁾은 운전자의 일시정지 표지판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있음.¹⁰⁾
 - 뉴욕 주는 일시정지 표지판에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경우 200달러 이상의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함.¹¹⁾
 - 미국 뉴욕 주의 109 경찰서 관할지역 교통법규 위반 통계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빈도가 가장 높은 10개 위반 사례 19,398건 중 빈도가 높은 순서는 표지판 위반(37.67%), 안전벨트 미착용(17.9%),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10.25%), 불법 선풍(8.62%), 무면허운전(6.09%) 등으로, 교통표지판 위반에 대한 단속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¹²⁾
- 영국은 1988년 발효된 『도로교통위반법(Road Traffic Offenders Act 1988)』¹³⁾을 근거로 일시정지 표지판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벌점·과태료(최대 1,000파운드)를 부과함.¹⁴⁾

■ 교통당국은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⁵⁾

-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교통·경찰 당국은 ① 일시정지 표지판 위반에 대해 범칙금·과태료·벌점 강화, ②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학교 주변 등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일시

8) 에이블뉴스(2015. 8. 4),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두려움에 떠는 장애인들”.

제주신보(2015. 11. 2), “횡단보도서도 보행자는 멈추고 자동차는 ‘썹썹’”.

경기일보(2015. 11. 20), “스쿨존 하세월·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아이들 불안한 등하교”.

광남일보(2015. 11. 29),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험천만”.

JTBC(2016. 1. 20),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노인’...보행 환경 체험해보니”.

9) <http://ypdcrime.com/vt/article26.htm#t1142>.

10) 단,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

11) <http://www.trafficticketviolationattorney.com/Traffic-Violations/Stop-Sign-Violations.shtml>.

12) 한국일보(2015. 1. 5), “지난해 플러싱 일대 운전자 교통법위반”.

13)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8/53/pdfs/ukpga_19880053_en.pdf.

14)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91661/dg_191955.pdf;

<http://www.thisismoney.co.uk/money/cars/article-1708393/How-fight-parking-ticket.html>.

1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관행도 운전자의 보행자 위협 운전에 일조하고 있으나 동 제도 도입 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아래 판례 참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검은 옷을 입고 주위를 살피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어 사망한 피해자에게 10%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대전지법 2014나106180),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만 4세 어린이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과실 20%를 인정(손해배상소송 2015나2005963).

정지 표지판 설치 확대, ③ 일시정지 표지판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과태료·범칙금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보행자 안전을 제고해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보험 영업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2004~2013년 자동차보험 연평균 합산비율¹⁶⁾은 107%이고, 자동차보험회사는 2014년에만 보험 영업수지에서 1조 1,3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¹⁷⁾ **kiri**

16) (발생손해액[보험금 포함]+순사업비)/수입보험료, 자동차보험영업수지는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 서비스 참조.

17)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 서비스 참조.